

“11월의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2024 총장 라온페스타’ 성료
총장로 일대 트리 점등에 환호성
인력 30여명 배치 등 안전에 만전
유동인구 30% ↑ … 활기 되찾아

“3.2.1 메리 크리스마스!”
경기 침체에 빠진 광주 총장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
된 ‘2024 총장 라온페스타’가 지난달 30
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 총장로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라온 미리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열렸
다.

이 행사는 ‘총장 라온페스타’의 일환으
로 진행됐다. ‘총장 라온페스타’는 시민들
의 발길을 총장로로 이끌어내기 위해 광
주시, 광주도시공사, 광주시 동구가 공동
주최해 지난 6월부터 총장로 상권 활성화
를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새롭고 특별한 이벤트다.

이날은 ‘K-POP 총장스타’ 경연대회
본선과 메인 이벤트인 ‘라온 미리 크리스
마스 점등식’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점등
식에 맞춰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비밀의 집’ 콘
셉트로 포토존과 성탄절 트리를 설치했
다. 또 총장로 인근 상가들도 행사에 동참
해 성탄절 트리를 매장 앞에 비치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어두컴컴했던 총장로
일대는 10초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성탄



광주 임택 동구청장과 내빈들이 지난달 30일 동구 총장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열린 동구 총장라온페스타 ‘라온 미리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절 트리가 일제히 점등되자 ‘열광의 도가
니’로 들썩였다. 마치 동화속 풍경이 실현
된 듯 ‘비밀의 집’ 포토존과 성탄절 트리
에 환하게 불이 켜지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환호성을 지르고 가족, 지인들과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친구들과 총
장로를 찾은 김다빈(19) 양은 “올해는 주

어진 부담감도 무거웠고 힘든 일도 많았
던 해였는데 크리스마스를 미리 경험하며
다 떨쳐낸 것 같다”면서 “덕분에 큰 위로
받은 기분이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K-POP 총장스타’ 결선
과 시상식도 시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
다.

지난 6월부터 예선 행사를 거치며 진출
한 10개 팀에 4개월 사이 팬층도 생기면
서 관중도 나날히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 모인 인파는 광주 동구 추
산 500여명으로 지난달보다는 비교적 줄
었지만, 총장로 우체국 사거리를 가득 메
웠다.

특히 군중 유체화 현상까지 생기며 안

전 문제 우려로 중단됐던 지난 10월 행사
(전남일보 10월 28일 4면)와 달리 이번
행사는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 돋보
였다.

안전요원으로만 30여명(광주 동구 12
명, 행사 추진단 등 13명, 외부 경호인력
5명)이 배치됐으며 울타리를 배치해 보행
자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에 만전
을 다했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 무대가 여전히 낮게 설치됐
음에도 안전 확보 노력 덕분에 보행자와
관객이 충돌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을
향한 안전요원들의 꾸준한 이동 요구에
인파 흐름도 유지돼 질서정연한 모습이었
다.

9월부터 꾸준한 K-POP 행사에 방문
했다는 최노을(33)씨는 “지난달 행사의
경우 관중석에 있다가 온 몸에 소름이 돋
는 등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인근
골목으로 대피까지 했으나 이번 행사는
행사 구역과 보행자 통로가 구분돼 안전
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며 “내년
에도 K-POP 행사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성 총장로 1·2·3가 상인회 회장은
“총장 라온페스타’와 ‘K-POP’ 콘텐츠
가 개발되면서 총장로 유동인구가 30%가
늘는 등 총장로 상권에 활기가 되돌아 오
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행사를 확대해 광
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
고 싶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정부, 5·18 유공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대법원서 확정

구금일수·장애등급 등 위자료 조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의 대법관)는 5·18민주화운동 유공
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
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해 지난달 28일 확정

했다.
앞서 2021년 11월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
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
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
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이에 5·18유공자들과 가족 894명은
“5·18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
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정
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외상후스
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
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

거나 사망하고 장애를 입기도 했다”며 유
공자들에게 425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애가 남지 않
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다만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
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2심의 경우 “유공자들에게 총 430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
소로 판결했다.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유지하면서
원고 12명의 구금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
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하면서 3억9000만
원을 추가한 430억여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을 판결에 상고 사유
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
각하는 절차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